

자료 09-07
경제위기 이후 조세정책 방향에 관한 정책토론회

경제위기 이후 조세정책 방향

2009. 8

전 병 목

자료 09-07
경제위기 이후 조세정책 방향에 관한 정책토론회

경제위기 이후 조세정책 방향

2009. 8.

전병목

 한국조세연구원

개 요

□ 주제 : 경제위기 이후 조세정책 방향

□ 일시 : 2009년 8월 18일(화) 15:00~17:00

□ 장소 : 은행회관 2층 국제회의실

□ 진행순서

15:00~15:10 개회사

원윤희 한국조세연구원 원장

15:10~16:40 주제발표 및 토론

▶ 사회자 곽태원 서강대 경제학부 교수

▶ 발표자 전병목 한국조세연구원 기획조정실장
「경제위기 이후 조세정책 방향」

▶ 토론자 고영선 한국개발연구원 연구3부장

박기백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

배상근 전국경제인연합회 경제본부장

온기운 매일경제신문 논설위원

이 영 한양대 경제금융학부 교수

정남기 한겨레신문 논설위원

(가나다순)

16:40~17:00 객석토론 및 종합정리

17:00 폐회

목 차

I. 서론	1
II. 위기대응 조세정책의 성과	3
1. 위기 대응 조세정책의 구성	3
2. 주요 정책에 대한 평가	6
가. 유가환급금 제도	6
나. 종합소득세율 인하 등	23
다. 법인세부담 인하	28
라. 그 외 세부담 경감정책	30
마. IMF의 평가	32
III. 외국의 정책동향	34
IV. 향후 정책방향	37
1. 재정상황에 대한 평가	37
2. 조세정책 방향	38

I. 서론

- 우리나라는 1980년대 후반 이후 지속된 세계적인 세율인하 추세에 따라 새로운 정부 출범 이후에도 낮은세율-넓은세원에 중점을 둔 조세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 2000년 이후에도 장기적 성장기반 확충을 위해 기업 및 개인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해 법인세율 인하, 소득세율 인하를 지속적으로 추진
 - 개인소득세 최고세율: 40%(2000)→ 33%(2010예정)
 - 법인소득세 최고세율: 28%(2000)→ 20%(2010예정)
 - 넓은세원 형성을 위한 노력도 강화하여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등 소득공제, 의료비 소득공제 범위 확대, 사업용계좌제도 도입, 가산세제도 개선 등을 실시
 - 근로장려금제도 등 중산서민층에 대한 지원도 강화

- 최근 미국발 금융위기로 시작된 세계적인 경기침체로 경기회복을 위한 단기적 세제지원방안도 재정지출 확대와 함께 실행
 - 2008년부터 고유가에 대응하기 위해 유류의 개별소비세 한시적 인하, 유가환급금 지급 등의 저소득층 지원정책과
 - 2009년 내수활성화를 위한 근로장려금 급여 인상,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폐지, 승용차 개별소비세 인하, 노후차 교체시 세제지원, 비수도권 골프장 등에 대한 소비세 인하도 시행

- 그러나 경기회복을 위한 정부의 재정지출 확대와 경기침체로 인한 세수감소는 재정건전성 유지의 불안요인으로 작용
 - 경기회복 속도에 대한 불확실성의 증가로 재정건전성 유지를 위한 세출 및 세입측면의 정책방안 수립이 필요

- 2008년 이후 시행된 경제위기 관련 조세정책을 평가하고 단기적 재정건전성과 중기적 성장을 조화시킬 수 있는 위기 이후 조세정책 방향을 검토할 필요
 - 재정건전성 회복에 기여할 수 있는 조세정책의 역할과 함께 성장잠재력 확충에도 기여하는 방안이 필요

- 본 연구의 구성은 다음과 같음
 - 2장은 2008년 이후 시행된 경제위기 관련 조세정책의 성과를 평가하고 국제기구의 시각도 분석
 - 3장은 경제위기 관련 외국의 정책동향과 재정건전성 관련 정책적 고려에 관해 살펴보고 마지막 장은 향후 정책방향을 제시

II. 위기대응 조세정책의 성과

1. 위기대응 조세정책의 구성

- 2008년 고유가와 미국발 금융위기로 시작된 경제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는 즉각적이고 집중적인 정책을 시행
 - 중산서민층 지원을 위해 유가환급금 지급, 근로장려금 50% 인상, 노후 자동차 교체시 소비세 인하, 유류세 인하 등 실시
 - 그 외에도 내수시장 활성화를 위한 승용차 소비세 한시적 인하, 다주택자 부동산양도세 중과 한시적 인하, 비수도권 골프장 소비세율 인하 등을 시행
 - 성장잠재력 향상을 위한 중장기적 정책으로 개인소득세와 법인세의 세율 인하를 단계적으로 시행
 - 세율 인하의 경우에도 중산층 및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먼저 시행함으로써 정책적 효과 극대화

<표 II-2> 경제위기 관련 조세정책의 구성

구분	단기적 수단(2008~2010)		중장기적 수단(2009~)	
	중산서민층 지원	전반적 내수진작	중산층/중소기업	전반
간접 지원 (세율 인하 등)	- 노후차량 교체시 개별소비세 인하 - 유류세 인하	- 승용차 개별소비세 인하 - 다주택자 부동산양도세 중과 폐지 - 비수도권 골프장 개별소비세 등 인하	- (1단계) 종합소득세율 인하 - (1단계) 법인세율 인하	- (2단계) 종합소득세율 인하 - (2단계) 법인세율 인하
직접 지원 (급여 지급 등)	- 유가환급금 지급 - 근로장려금 인상			

- 조세정책의 구성은 단기적 수단과 중장기적 수단, 효과성 제고를 위한 즉시성의 확보와 지원계층의 특정화 등의 측면에서 긍정적
 -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단기적 정책으로 위기상황에서 큰 충격을 받는 중산서민층에 대한 지원과 전반적인 내수 활성화를 위한 정책이 균형을 이룸
 - 중산서민층에 대한 지원은 대상의 특정화를 위해 주로 직접적인 소득지원의 형태로 이루어 졌는데 이는 유가환급금과 근로장려금으로 소득수준을 고려하여 지원
 - 소비활동과 연계된 정책으로 10년 이상 노후승용차 교체시 개별소비세 인하도 시행
 - 전반적인 내수 활성화를 위해서는 승용차 개별소비세 인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적 폐지, 비수도권 골프장 개별소비세 인하 등 추진
 - 소비여력이 있는 계층의 소비 유도

- 중장기적 성장지원을 위한 조세정책도 추진되었는데 이는 종합소득세율 및 법인세율의 단계적 인하
 - 세율 인하는 단계적으로 추진되며 이의 공표를 통해 기업 및 개인들의 경제활동 의지를 제고
 - 2009년부터 적용되는 1단계 세율 인하는 주로 중산서민층과 중소기업에 대한 집중적 지원
 - 낮은 세율의 인하 및 법인세 과표구간 상향조정

- 조세정책의 재원규모는 2008년 6.2조원 수준에서 세율 인하로 2010년 13.2조원 규모로 증가
 - 이후 추가적인 감세규모는 2011년 3.9조원, 2012년 0.4조원으로 미미
 - 정책의 구성은 초기 일시적 감세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다가 점차 성장잠재력 향상을 위한 항구적 감세가 증가

<표 II-3> 조세정책의 규모

(단위: 조원)

	2008년	2009년	2010년
세입 정책수단	-6.2	-10.2	-13.2
- 항구적 감세	-1.8	-7.6	-10.7
- 일시적 수단	-4.4	-2.6	-2.5

□ 경기대응 정책의 구성을 외국사례와 비교해 보아도 유사한 수준

○ 2009년 기준 전체 재정지출 중 조세정책의 비중은 27% 수준으로 G20 평균인 23%와 유사하여 적절한 수준

- 세부항목의 경우, 기업활동에 대한 지원이 16%로 G20의 10%보다 조금 높은 수준이나 기업투자 유도라는 측면에서 문제는 없음

<표 II-4> 경제위기 관련 재정정책의 구성

(단위: %)

	G20 평균	대한민국
재정지출 정책수단	77	73
- 인프라	32	28
- 중소기업	1	21
- 사회안전망	20	22
- 주택	5	0
- 전략적 수단	4	0
- 기타	16	2
세입 정책수단	23	27
- 개인소득세	8	6
- 간접세	4	3
- 법인소득세	10	16
- 기타	1	1

자료: IMF Staff Report for the 2009 Article IV Consultation, IMF, 2009. 7

2. 주요 정책에 대한 평가

- 2008년 이후 경제위기 극복 등을 위해 시행한 조세정책에 대한 평가는 그 규모 및 시행시기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전반적으로 지원규모가 큰 정책에 대한 분석이 상대적으로 효과검증에 유리할 것이며 검증 가능한 자료의 구득가능성이라는 측면에서는 시행시기가 상당히 지난 정책이 바람직

- 이러한 측면에서 2008년 시행한 유가환급금제도* 등 정책효과에 대한 자료분석이 가능한 제도를 중심으로 분석
 - 자료획득, 시행시기 측면에서 어려움이 있는 종합소득세, 법인소득세 인하 등은 시뮬레이션 분석결과 등을 통해 검토
 - * 유가환급금제도는 2008년 시행한 저유가극복 종합대책 중 근로자 및 자영업자 지원방안의 하나이며 그 외에도 대중교통·물류 및 농어민을 위한 유가연동 환급금, 자가용화물차 유류세 환급, 난방유 유류세 동절기 한시적 인하 등이 포함

가. 유가환급금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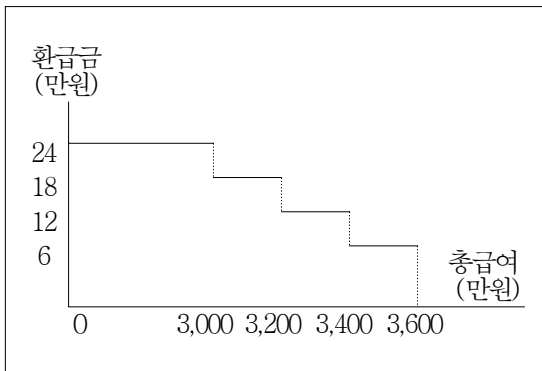
1) 유가환급금 정책 개요

- 2008년 유가 상승에 따른 유류비 부담 증가를 완화하기 위해 유가환급금을 소득세 환급방식으로 지급
 - 지급대상은 2008년 동안 근로하였거나 사업을 영위한 자로서 2007년 기간 소득이 근로자의 경우 3,600만원, 종합소득자의 경우 2,400만원 이하인 자
 - 2007년 소득이 없는 자는 2008년 소득기준으로 지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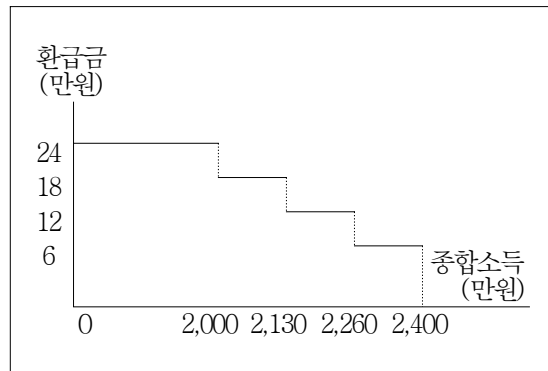
- 지급금액은 소득수준에 따라 6만원~24만원을 차등지급
 - 3,000만원 미만 근로소득자, 2,000만원 미만 종합소득자는 24만원, 그 이상 소득자에게는 18만원, 12만원, 6만원을 차등 지급
- 유가환급금 1차 지급은 2008년 4/4분기에 이루어졌으며 그 규모는 2.7조 원 수준
 - 유가환급금은 근로소득자의 경우 10월, 종합소득자 12월에 반기별 지급 형태로 지급됨
 - 지급된 유가환급금은 2008년 4분기(혹은 2009년 1분기)까지 소비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예상됨
 - 2008년 신규 근로자, 사업영위자의 경우 2009년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지급

< 유가 환급금 지급 개요 >

근로자 유가 환급금



자영자 유가 환급금



2) 유가환급금제도의 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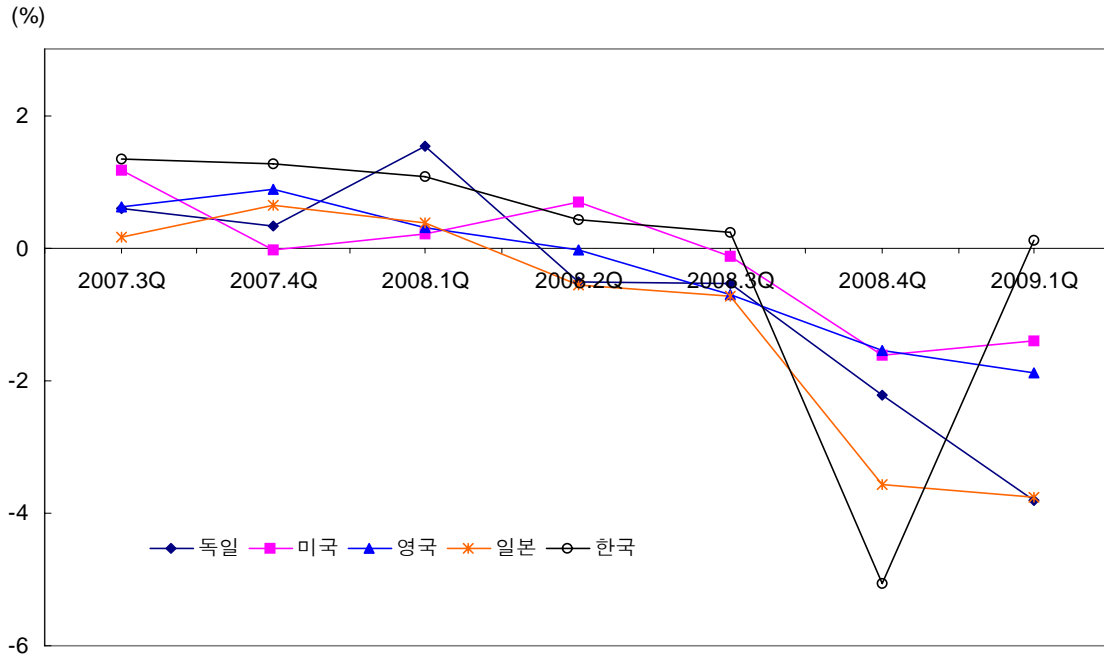
가) 국가간 비교

- 2008년 경제위기 대응정책으로 신속한 재정지출이 이루어진 나라는 없는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고유가 대응정책으로 사전적으로 계획 및 실행
 - 외국과 비교한 2008년 4분기 성장률을 통해 유가환급금 정책의 효과를 가늠해 볼 수 있음

- 2008년 4분기~2009년 1분기 기간의 GDP성장률은 누적 -4.96% 수준으로 일본, 독일보다는 양호하지만 영국, 미국보다는 낮은 수준
 - 유가환급금제도 등 감세정책의 경기부양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될 수도 있지만 영국, 미국 등의 사례를 감안할 때 혼조세

- 경제위기가 없었던 2007년 4분기~2008년 1분기 성장률을 기준으로 2008년 4분기~2009년 1분기를 평가하면 성장률 악화율이 낮아 정부 정책효과를 확인할 수 있음
 - 두 분기 누적성장률 변동률은 우리나라의 경우 -3.1배로 영국, 미국, 독일, 일본 등보다 양호한 수준
 - 즉 경기침체에 지급된 유가환급금 등 정부 정책으로 성장률 하락세가 다른 국가들보다 완화되었다고 할 수 있음
 - 잠재성장률 등 각 국가별 특성을 감안하기 위해 경제위기가 없었던 직전연도 동일기간의 성장률을 기준으로 분석

[그림 II-1] 주요국의 GDP 성장률(전분기 대비)



<표 II-4> 주요국의 GDP 성장률(전분기 대비)

(단위: %)

구분	2007.3Q	2007.4Q	2008.1Q	2008.2Q	2008.3Q	2008.4Q	2009.1Q
독일	0.60	0.34	1.53	-0.50	-0.54	-2.23	-3.80
미국	1.17	-0.04	0.22	0.70	-0.13	-1.62	-1.40
영국	0.62	0.89	0.31	-0.03	-0.72	-1.55	-1.89
일본	0.15	0.65	0.39	-0.56	-0.72	-3.57	-3.76
한국	1.33	1.27	1.08	0.43	0.24	-5.07	0.12

자료: www.oecd.int/olis/sta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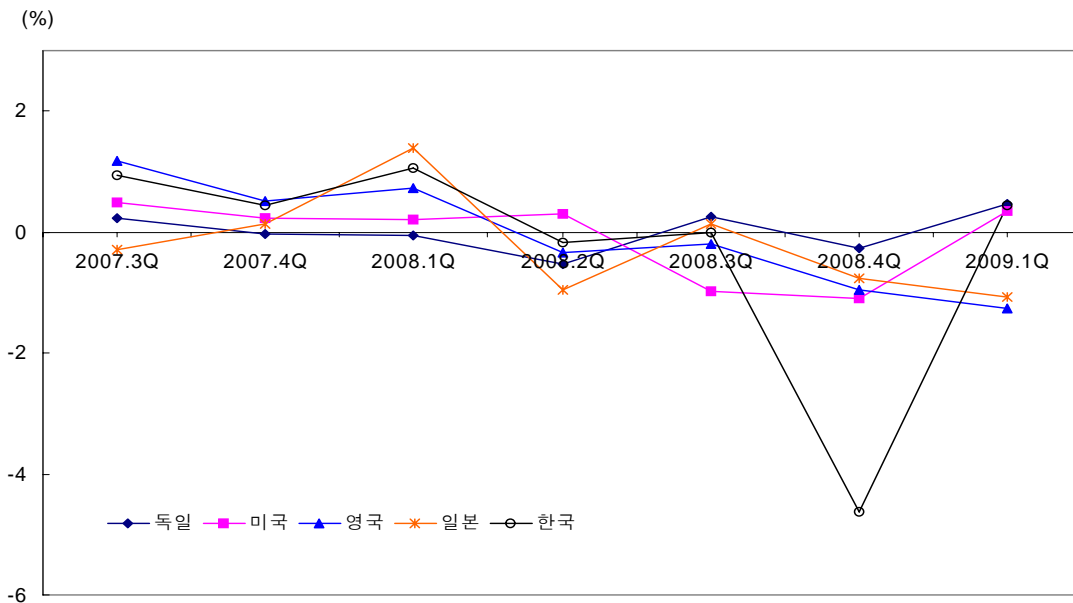
<표 II-5> 주요국의 GDP 성장률 변화

(단위: %)

구분	누적성장률			누적성장률			변동률 (B-A)/A
	2007.4Q	2008.1Q	(A)	2008.4Q	2009.1Q	(B)	
독일	0.34	1.53	1.88	-2.23	-3.8	-5.95	-4.2
미국	-0.04	0.22	0.18	-1.62	-1.4	-3.00	-17.7
영국	0.89	0.31	1.20	-1.55	-1.89	-3.41	-3.8
일본	0.65	0.39	1.04	-3.57	-3.76	-7.20	-7.9
한국	1.27	1.08	2.36	-5.07	0.12	-4.96	-3.1

- 유가환급금 등에 따라 보다 직접적인 변화를 보이는 민간소비변동을 살펴보면 GDP 성장률과 같이 우리나라의 변화폭이 상당히 큰 수준
 - 2008년 4분기의 경우 -4.6%로 비교대상 5개국 중 가장 낮은 수준이나 2009년 1분기는 +0.5%로 상대적으로 크게 개선

[그림 II-2] 주요국의 민간소비증감률(전분기 대비)



<표 II-6> 주요국의 민간소비증감률(전분기 대비)

(단위: %)

구분	2007.3Q	2007.4Q	2008.1Q	2008.2Q	2008.3Q	2008.4Q	2009.1Q
독일	0.2	0.0	-0.1	-0.5	0.2	-0.3	0.5
미국	0.5	0.2	0.2	0.3	-1.0	-1.1	0.3
영국	1.2	0.5	0.7	-0.3	-0.2	-1.0	-1.3
일본	-0.3	0.1	1.4	-1.0	0.1	-0.8	-1.1
한국	0.9	0.4	1.1	-0.2	0.0	-4.6	0.5

자료: www.oecd.int/olis/stat

- 국가별 특수성을 반영하기 위해 전년도 두 분기 누적성장률 기준 대비 변동률을 살펴보아도 우리나라가 -3.7배로 가장 높은 수준
 - 경제위기에 따라 비교대상 국가들보다 기준기간 대비 소비수준이 크게 하락하였는데 이는 고용시장 혹은 소비성향의 변화에 기인할 수 있음
 - 고용시장의 변화는 소득변화를 반영하는 지표이며 소비성향은 경제 위기에 따른 가계의 행태변화를 반영하는 지표

<표 II-7> 주요국의 민간소비 변동

(단위: %)

구분	누적성장률			누적성장률			변동률 (B-A)/A
	2007.4Q	2008.1Q	(A)	2008.4Q	2009.1Q	(B)	
독일	0.0	-0.1	-0.10	-0.3	0.5	0.20	-3.0
미국	0.2	0.2	0.40	-1.1	0.3	-0.80	-3.0
영국	0.5	0.7	1.20	-1	-1.3	-2.29	-2.9
일본	0.1	1.4	1.50	-0.8	-1.1	-1.89	-2.3
한국	0.4	1.1	1.50	-4.6	0.5	-4.12	-3.7

- 고용시장의 변화는 실업률을 통해 파악되는데, 우리나라는 정부정책의 효과 등으로 외국에 비해 실업률 증가가 상대적으로 낮은 편임
 - 국가별 특성을 제거하기 위해 전년도 두 분기 평균 실업률을 기준으로 경제위기 기간의 평균 실업률의 변화율을 비교
 - 전년 대비 두 분기 평균실업률 변화율은 0.08로 독일의 -0.06을 제외하면 가장 낮은 수준
 - 이러한 결과는 근로자들의 소득감소가 다른 국가들에 비해 적게 나타났음을 의미

<표 II-8> 주요국의 분기별 실업률 추이

(단위: %)

구분	2007.3Q	2007.4Q	2008.1Q	2008.2Q	2008.3Q	2008.4Q	2009.1Q
독일	8.3	8.0	7.6	7.4	7.2	7.2	7.5
미국	4.7	4.8	4.9	5.4	6.0	6.9	8.1
영국	5.3	5.2	5.2	5.4	5.8	6.3	7.0
일본	3.8	3.8	3.8	4.0	4.0	4.0	4.4
한국	3.2	3.1	3.1	3.2	3.2	3.2	3.5

자료: www.oecd.int/olis/stat

<표 II-9> 주요국의 실업률 변동

(단위: %)

구분	평균실업률			평균실업률			변동률 (B-A)/A
	2007.4Q	2008.1Q	(A)	2008.4Q	2009.1Q	(B)	
독일	8.0	7.6	7.8	7.2	7.5	7.4	-0.06
미국	4.8	4.9	4.9	6.9	8.1	7.5	0.55
영국	5.2	5.2	5.2	6.3	7.0	6.7	0.28
일본	3.8	3.8	3.8	4.0	4.4	4.2	0.11
한국	3.1	3.1	3.1	3.2	3.5	3.4	0.08

- 민간소비의 급격한 하락은 소득측면의 효과보다 행태변화 등의 다른 요인에 의한 결과
 - 오히려 고용유지를 위한 정부의 노력이 외국에 비해 효과적이었음을 시사
 - 유가환급금의 지급은 전반적인 가계 소득상승에 기여한 것으로 판단

- 소득의 급격한 감소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민간소비가 크게 감소한 것은 평균소비성향 등 가계의 행태변화가 원인
 - 가계의 평균소비성향(2008년 4분기~2009년 1분기)은 경제위기 이전 기간(2007년 4분기~2008년 1분기)에 비해 하락하여 민간소비를 축소
 - 구체적으로 소비심리 위축으로 전 가구 평균소비성향은 전년도 76.6%에서 위기기간 중 74.9%로 1.7%p 하락
 - 근로자 가구의 평균소비성향 하락폭은 상대적으로 낮은 -1.1%p

<표 II-10> 가구 평균소비성향 변화

(단위: %)

구분	평균소비성향			평균소비성향			변동 폭 (B-A)
	2007.4Q	2008.1Q	(A)	2008.4Q	2009.1Q	(B)	
전 가구	74.5	78.7	76.6	74.0	75.8	74.9	-1.7
근로자 가구	69.8	73.8	71.8	70.0	71.5	70.8	-1.1

- 그러므로 유가환급금을 통한 소득지원정책은 전반적인 소비증가를 통해 경기급락 방지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됨
 - 단 소비심리 악화로 인한 평균소비성향 하락으로 유가환급금의 영향은 민간소비 감소폭이 축소되는 것으로 나타남

- 소득계층별로는 유가환급금이 평균소비성향이 증가한 1~3분위 계층에 많이 지원되어 민간소비 증가 효과에 기여한 것으로 판단됨
 - 저소득층에 집중된 재정지원으로 일부 소득감소에도 불구하고 소비수준을 유지하는 데 기여하여 지원의 효율성도 높았음

- 1분위의 소비성향은 경제위기 기간에 85.5%p(37.2%) 상승하여 소득감소율 -7.8%를 상회하였으며 2분위도 4.0%p 소비성향이 상승하여 소득감소폭 -0.4%를 상회
- 3분위의 경우 소득도 증가하였으며 소비성향도 4.3%p 증가
- 전반적인 민간소비의 감소는 소비심리가 악화된 4분위 이상 계층의 소비축소에 따른 결과

□ 경제위기에 따른 가구 총소득도 1, 2분위를 제외하고는 증가

- 도시근로자가구 기준으로는 1분위만 총소득이 감소

<표 II-11> 현 위기 전후 소득분위별 평균소비성향(도시, 전가구기준)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6분위	7분위	8분위	9분위	10분위
	2007.4Q	191.3	106.6	94.1	88.8	81.2	80.7	75.6	72.9	65.4	54.4
	2008.1Q	268.0	117.3	100.1	93.7	90.5	83.1	79.1	76.7	67.3	56.8
평균소비성향(A)		229.7	112.0	97.1	91.3	85.9	81.9	77.4	74.8	66.4	55.6
	2008.4Q	222.7	113.0	98.2	89.3	81.0	80.4	74.0	68.8	62.8	53.5
	2009.1Q	407.5	118.9	104.6	90.8	83.8	80.5	76.1	72.0	69.1	51.0
평균소비성향(B)		315.1	116.0	101.4	90.1	82.4	80.5	75.1	70.4	66.0	52.3
변화 폭(B-A)		85.5	4.0	4.3	-1.2	-3.4	-1.5	-2.3	-4.4	-0.4	-3.3

<표 II-12> 현 위기 전후 소득분위별 소득변화(도시, 전 가구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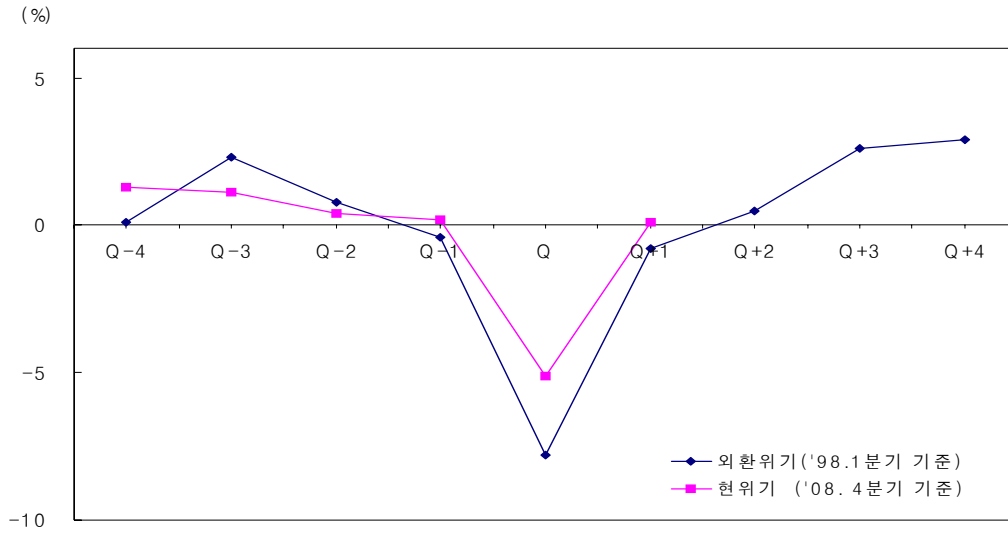
(단위: 천원/월)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6분위	7분위	8분위	9분위	10분위
2007.4Q	615	1,354	1,863	2,293	2,717	3,155	3,627	4,240	5,192	8,680
2008.1Q	589	1,366	1,886	2,342	2,808	3,266	3,790	4,468	5,616	9,402
평균소득(A)	602	1,360	1,875	2,317	2,763	3,210	3,709	4,354	5,404	9,041
2008.4Q	635	1,422	1,947	2,381	2,837	3,303	3,802	4,432	5,454	8,778
2009.1Q	474	1,287	1,830	2,292	2,785	3,260	3,784	4,485	5,590	9,517
평균소득(B)	554	1,355	1,889	2,336	2,811	3,281	3,793	4,458	5,522	9,147
변화율 (B-A)/A*100)	-7.8	-0.4	0.8	0.8	1.7	2.2	2.3	2.4	2.2	1.2

나) IMF 외환위기시와의 비교

- 우리나라가 과거 겪었던 IMF 외환위기시와 비교한 2008년 경제위기는 현재까지 유사한 과정을 보이나 그 진폭은 축소
 - GDP 성장률, 민간소비증가율 모두 1998년 외환위기시에 비해 충격 정도가 작은 편임
 - 위기발생 시점 기준(1998년 1분기, 2008년 4분기) GDP 증가율과 민간 소비증가율은 외환위기시 -7.8%, -14.6%로 금번 위기시 -5.1%, -4.6% 보다 큰 충격

[그림 II-3] 분기별 GDP 성장률(전분기 대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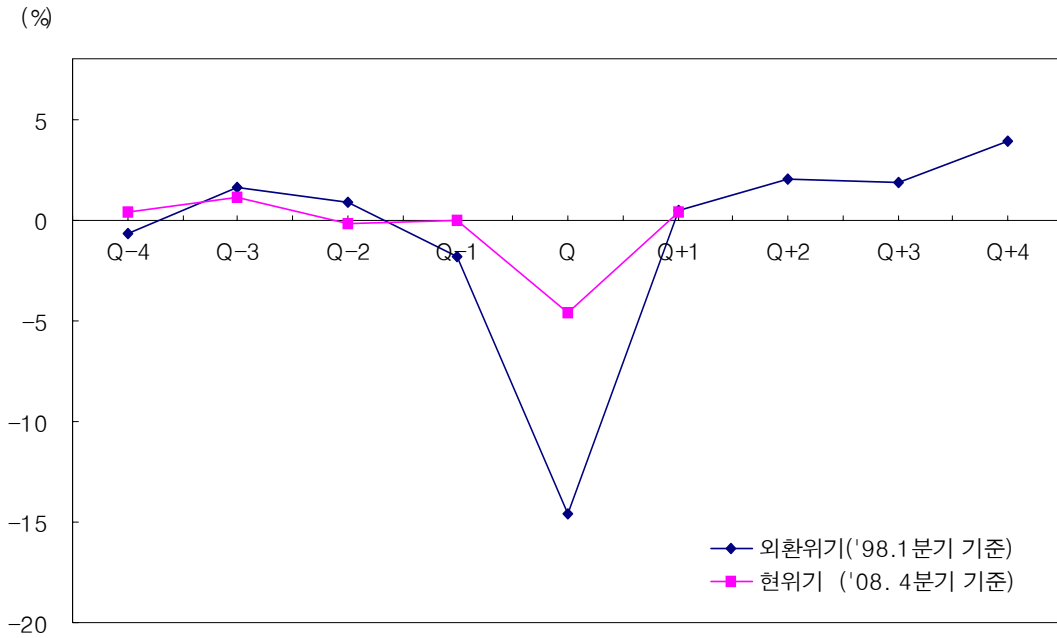
<표 II-13> 위기시 성장률 변화(전분기 대비)

(단위: %)

구분	Q-4	Q-3	Q-2	Q-1	Q	Q+1	Q+2	Q+3	Q+4
외환 위기	0.1	2.3	0.8	-0.4	-7.8	-0.8	0.5	2.6	2.9
경제 위기	1.3	1.1	0.4	0.2	-5.1	0.1	-	-	-

주: 외환위기의 발생시기(Q)는 1998년 1분기, 경제위기(Q)는 2008년 4분기 기준

[그림 II-4] 분기별 민간소비지출 증감률(전분기 대비)



<표 II-14> 위기시 민간소비 변화(전분기 대비)

(단위: %)

구분	Q-4	Q-3	Q-2	Q-1	Q	Q+1	Q+2	Q+3	Q+4
외환 위기	-0.7	1.6	0.9	-1.8	-14.6	0.5	2.0	1.9	3.9
경제 위기	0.4	1.1	-0.2	0.0	-4.6	0.4	-	-	-

주: 외환위기의 발생시기(Q)는 1998년 1분기, 경제위기(Q)는 2008년 4분기 기준

- 과거 우리나라가 경험했던 외환위기에 비해, 2008년 경제위기의 성장률에 의 영향은 적었던 것으로 평가
 - 위기 이전 대비 위기시 성장률 변동률은 외환위기시 -4.6배에 비해 2008년 경제위기시에는 -3.1배로 경제 변동성이 크게 축소
 - 위기이전 시기 대비 경제 변동성이 축소된 것은 금융, 조세, 재정정책 등 상당부분 정부 정책의 효과로 볼 수 있음

<표 II-15> 위기시 GDP 변동폭(전분기 대비)

(단위: %)

구분	누적성장률			누적성장률			변동률 (B-A)/A
	Q-4	Q-3	(A)	Q	Q+1	(B)	
외환위기	0.1	2.3	2.4	-7.8	-0.8	-8.5	-4.6
경제위기	1.3	1.1	2.4	-5.1	0.1	-5.0	-3.1

주: 외환위기의 발생시기(Q)는 1998년 1분기, 경제위기(Q)는 2008년 4분기 기준

- 민간소비 변화를 살펴보다도 외환위기 시기보다 2008년 경제위기 시기의 소비변화율이 크게 낮아져 유가환급금 등 정부정책의 효과를 확인가능
 - 외환위기시 민간소비 누적성장률은 전년 동기 대비 -16.9배로 악화되었으나 금번 경제위기에는 -3.8배로 현저히 개선
 - 고용유지, 저소득층 지원 등 정부정책의 영향으로 민간소비 악화가 이전에 비해 크게 개선

<표 II-16> 위기시 민간소비 변동폭(전분기 대비)

(단위: %)

구분	누적성장률			누적성장률			변동률 (B-A)/A
	Q-4	Q-3	(A)	Q	Q+1	(B)	
외환위기	-0.7	1.6	0.9	-14.6	0.5	-14.2	-16.9
경제위기	0.4	1.1	1.5	-4.6	0.4	-4.2	-3.8

주: 외환위기의 발생시기(Q)는 1998년 1분기, 경제위기(Q)는 2008년 4분기 기준

- GDP 성장률 변화율에 대한 민간소비 변동률의 비율도 외환위기 시기에 비해 크게 개선
 - 위기 이전 시기와 비교한 위기시 변동률이 외환위기시 3.7배에서 금번 경제위기 기간 동안에는 1.2배로 변동폭이 현저히 축소
 - 유가환급금 등 민간소비 활성화를 위한 정부 정책의 효과로 성장률 감소폭에 비해 민간소비 감소폭이 낮게 나타남

<표 II-17> 위기시 GDP와 민간소비 변동폭의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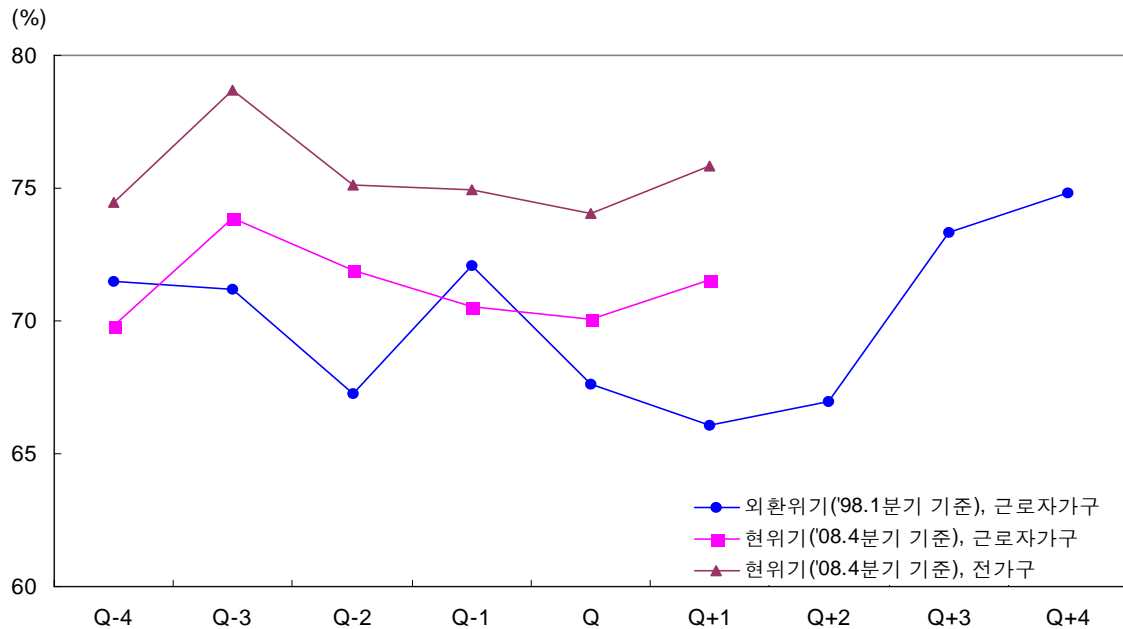
(단위: %, 배)

	GDP 변동률(A)	민간소비 변동률(B)	B/A(배)
외환위기	-4.6	-16.9	3.7
경제위기	-3.1	-3.8	1.2

주: <표 II-16>, <표 II-15>의 결과를 활용

- 민간소비 효과를 결정하는 평균소비성향도 다른 지표와 마찬가지로 외환 위기시보다 금번 경제위기시 하락 폭이 낮은 편
 - 또한 평균소비성향의 회복도 외환위기 경우보다 빠른 시점에서 발생
 - 외환위기시의 경우, 근로자가구의 평균소비성향은 위기 이후 2분기째 부터 회복되었으나 2008 경제위기는 위기 이후 1분기째 회복

[그림 II-5] 가구별 평균소비성향(가구원 2인 이상)



주: 도시가구 기준

<표 II-18> 위기시 평균소비성향 변화(도시근로자가구, 전분기 대비)

(단위: %)

구분	Q-4	Q-3	Q-2	Q-1	Q	Q+1	Q+2	Q+3	Q+4
외환 위기	71.5	71.2	67.2	72.1	67.6	66.1	67.0	73.3	74.8
경제 위기	69.8	73.8	71.9	70.5	70.0	71.5	-	-	-

주: 외환위기의 발생시기(Q)는 1998년 1분기, 경제위기(Q)는 2008년 4분기 기준

- 위기발생 이전 시기와의 비교에 있어서도 2008년 경제위기시 평균소비성향의 변화율은 -1.5% 수준으로 외환위기시의 -6.3%에 비해 현저히 개선
 - 이는 경제위기에 대한 가계의 인식수준의 차이와 함께 고용, 소득수준의 변화 등의 영향에 따른 것
 - 이러한 효과 중에는 정부의 정책에 의한 고용유지, 소득증가 등의 영향도 포함

<표 II-19> 위기시 평균소비성향 변동폭(도시근로자 기준)

(단위: %)

구분	평균소비성향			평균소비성향			변동률 (B-A)/A*100
	Q-4	Q-3	(A)	Q	Q+1	(B)	
외환위기	71.5	71.2	71.4	67.6	66.1	66.9	-6.3
경제위기	69.8	73.8	71.8	70.0	71.5	70.8	-1.5

주: 외환위기의 발생시기(Q)는 1998년 1분기, 경제위기(Q)는 2008년 4분기 기준

- 경제위기시 주요 정책인 유가환급금의 효과를 살펴보기 위해 이러한 정책이 시행되지 않았던 외환위기 시기의 소득계층별 평균소비성향의 변화와 비교해 볼 필요
 - 단순한 경제위기에 따른 기대변화와 정부정책의 효과를 분리하기 위한 방법의 하나

- 외환위기와 현 경제위기시 소득계층별 평균소비성향 변화를 살펴보면, 상당한 차이를 발견할 수 있음
 - 외환위기시에는 1분위와 4분위를 제외한 전 소득계층의 평균소비성향이 하락하여 위기를 가구지출 감소로 대응한 것을 확인 할 수 있음
 - 가구 총소득도 가장 소득이 높은 10분위를 제외한 전 계층에서 대폭 감소하여 내수감소가 크게 나타났음
 - 반면 1분위는 평균소비성향이 전년에 비해 28.2%p 증가하였는데 이는 절대적 소득감소(-21.8%)에도 불구하고 소비를 줄이기 어려웠기 때문
 - 평균소비성향 하락폭은 2~7분위보다 고소득 계층인 8~10분위가 크게 나타나며 최고소득계층인 10분위 하락폭은 11.9%p로 최대
 - 민간소비 감소의 주요인
 - 반면 금번 경제위기에는 평균소비성향이 급격히 하락하지 않아 가구의 위기인식 혹은 정부의 안정화 정책이 영향을 미쳤음을 시사
 - 가구 총소득도 1분위를 제외한 전 분위에서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증가하여 충격의 정도는 이전에 비해 상당히 낮았던 것으로 평가
 - 평균소비성향 변화는 외환위기시와 달리 일정한 패턴을 보여주지 않고 있으며 1분위의 소득감소(-2.8%)에 따른 소비성향 증가폭(12.9%p)도 크게 낮아짐
 - 절대 빈곤상태에 가까운 1분위(하위10%)의 경우, 소득감소를 보전할 수 있는 유가환급금 등의 영향으로 평균소비성향 증가폭이 외환위기시보다 낮게 나타날 수 있음.
 - 2분위의 경우, 유가환급금 등으로 인한 소득증가(0.8%)와 소비성향 증가가 동시에 나타나 내수회복에 기여
- ※ 가계조사자료를 이용한 한국조세연구원 분석에 따르면 최저생계비에 소득이 미달하는 절대빈곤 가구비율은 2008년 3.2%, 중위소득의 50% 미만인 상대빈곤 가구비율은 11.0% 수준

- 외환위기시와의 비교분석에서도 금번 경제위기에 실시한 유가환급금은 하위 1~2분위 소득계층의 소비증가에 기여한 것으로 추정됨
 - 절대 빈곤계층에 가까운 1분위는 소득지원으로 소득감소 폭이 이전에 비해 크게 축소되었으며
 - 2분위 계층은 절대적 소득과 함께 소비성향이 소폭 증가하여 전반적 소비가 증가

<표 II-20> 경제위기 전후 소득분위별 평균소비성향(도시, 근로자가구기준)
(단위: %)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6분위	7분위	8분위	9분위	10분위
외환위기											
	Q-4	124.1	92.0	84.1	78.4	75.5	70.5	69.5	67.4	68.2	58.3
	Q-3	111.3	86.6	80.4	76.0	74.0	73.3	68.5	66.7	62.7	64.4
평균소비성향(A1)		117.7	89.3	82.3	77.2	74.8	71.9	69.0	67.1	65.5	61.4
	Q	154.6	87.0	79.8	76.0	71.7	71.3	67.1	65.2	60.5	52.5
	Q+1	137.1	88.4	82.5	80.0	73.9	69.2	67.4	64.0	62.4	46.4
평균소비성향(B1)		145.9	87.7	81.2	78.0	72.8	70.3	67.3	64.6	61.5	49.5
변화폭 (C=B1-A1)		28.2	-1.6	-1.1	0.8	-1.9	-1.7	-1.8	-2.5	-4.0	-11.9
경제위기											
	Q-4	116.5	91.7	88.1	78.9	82.0	76.5	74.1	65.5	61.4	51.4
	Q-3	140.9	99.1	92.7	86.4	83.4	79.7	79.3	71.0	64.9	53.0
평균소비성향(A2)		128.7	95.4	90.4	82.7	82.7	78.1	76.7	68.3	63.2	52.2
	Q	133.5	96.4	87.7	78.9	79.9	76.9	69.6	68.3	59.7	51.0
	Q+1	149.6	105.4	89.6	82.7	79.4	80.0	76.6	69.6	67.1	47.5
평균소비성향(B2)		141.6	100.9	88.7	80.8	79.7	78.5	73.1	69.0	63.4	49.3
변화폭(D=B2-A2)		12.9	5.5	-1.8	-1.8	-3.1	0.4	-3.6	0.7	0.2	-3.0

<표 II-21> 경제위기 전후 소득분위별 평균소득 변화(도시, 근로자가구기준)

(단위: 천원/월)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6분위	7분위	8분위	9분위	10분위
외환위기											
	Q-4	695	1,122	1,397	1,637	1,883	2,148	2,462	2,870	3,471	5,281
	Q-3	721	1,148	1,413	1,633	1,848	2,089	2,373	2,744	3,281	4,866
가구평균소득(A1)		708	1,135	1,405	1,635	1,866	2,118	2,418	2,807	3,376	5,073
	Q	555	1,046	1,316	1,552	1,795	2,059	2,379	2,786	3,379	5,451
	Q+1	553	985	1,229	1,451	1,664	1,897	2,186	2,525	3,014	5,438
가구평균소득(B1)		554	1,015	1,272	1,501	1,729	1,978	2,283	2,655	3,197	5,444
변화율 (B1-A1)/A1*100		-21.8	-10.6	-9.5	-8.2	-7.3	-6.6	-5.6	-5.4	-5.3	7.3
경제위기											
	Q-4	1,036	1,733	2,195	2,612	3,035	3,455	3,940	4,591	5,605	9,166
	Q-3	1,062	1,783	2,274	2,741	3,190	3,667	4,208	4,958	6,230	9,903
가구평균소득(A2)		1,049	1,758	2,235	2,677	3,112	3,561	4,074	4,774	5,917	9,535
	Q	1,080	1,811	2,293	2,741	3,195	3,634	4,129	4,799	5,874	9,133
	Q+1	959	1,733	2,237	2,707	3,164	3,626	4,209	4,982	6,163	10,237
가구평균소득(B2)		1,020	1,772	2,265	2,724	3,180	3,630	4,169	4,890	6,018	9,685
변화율 (B2-A2)/A2*100		-2.8	0.8	1.4	1.8	2.2	1.9	2.3	2.4	1.7	1.6

나. 종합소득세율 인하 등

1) 종합소득세제 변화

- 2008년 세제개편을 통해 변화된 내용은 크게 소득세 공제체계 변화와 소득세율의 단계적 인하
 - 주요 내용은 소득세율을 2009~2010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2%p 인하하는 동시에 기본공제액 인상, 근로소득공제율 인하

- 소득세율의 단계적 인하는 중산서민층에 대한 고려를 위해 낮은 소득구간의 세율이 먼저 낮아지는 형태로 구성
 - 소득구간 1,200만원 이하에 적용되는 최저세율은 2009년에 2%p 인하되는 반면 최고세율(소득구간 8,800만원 초과)은 2010년에 2%p 인하 예정

<표 II-22> 구간별 소득세율

근로소득구간	2008년	2009년	2010년
~1,200만원	8%	6%	6%
1,200만원~4,600만원	17%	16%	15%
4,600만원~8,800만원	26%	25%	24%
8,800만원~	35%	35%	33%

- 공제제도의 변화는 과세기반 확충과 기본적 생활비용의 반영이라는 측면에서 기본공제 인상과 근로소득공제율의 인하로 구성
 - 기본공제는 현행 100만원/인에서 150만원/인으로 상향
 - 근로소득공제율 변화는 100% 공제되는 최저구간의 공제율을 하향 조정함으로써 과세자비율 확대를 추구

<표 II-23> 근로소득공제 구간별 공제율

근로소득구간	2008년	2009년
~500만원	100%	80%
500만원~1500만원	50%	50%
1500만원~3000만원	15%	15%
3000만원~4500만원	10%	10%
4500만원~	5%	5%

2) 소득세제 변화의 효과

- 소득세율 인하의 효과는 크게 장기적인 성장자극 효과와 단기적인 소득 분배 변화효과로 나누어 볼 수 있음
 - 성장효과는 세율 인하로 인한 추가소득의 소비촉진 및 근로활동의 유도를 통해 나타나는데 금번 소득세율 인하 정책의 추진 이유
 - 소득세율 변화로 인한 직접적인 분배효과도 나타나게 되는데, 이는 단기적인 효과로 성장에 따른 일자리 창출 등으로 인해 중장기적으로는 변화 가능

가) 성장 효과

- 소득세율 인하로 인한 성장효과는 재정승수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 경제에 대한 IMF(2009)보고서에 따르면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나타남
 - 소득세율 인하의 재정승수는 1차년도 0.27로 상당히 높게 나타나며 이는 5년차까지도 유사한 수준으로 유지
 - 10년차에는 그 효과가 더욱 증가하여 0.4 수준에 가깝게 증가
 - 소득세율 인하의 재정승수는 단기적으로 법인세율 인하의 효과보다 높게 나타나는데 1차년도의 경우 법인세율 인하효과의 두 배 수준
- 금번 경제위기로 인한 소득수준 변화, 평균소비성향 변화가 이전의 위기에 비해 현저히 낮은 점을 감안하면 소득세율 인하의 성장자극효과는 상당할 것으로 전망
 - 경제가 회복단계에 들어설 것으로 예상되는 2010년의 소득세율 인하는 중장기 성장촉진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임

- 소득세율 인하는 고소득층의 소비심리 안정화에도 기여하였는데 2009년 1/4분기(위기 직후 분기, Q+1) 평균소비성향의 전년 동기(Q-3)대비 변화는 과거 외환위기시 변화보다 크게 개선됨(<표 II-20>참조)
 - 위기 직후 분기의 9, 10분위 평균소비성향은 전년 동기 대비 각각 2.2%p(64.9%→67.1%), -5.5%p(53.0%→47.5%) 변화하여 외환위기시보다 크게 개선
 - 외환위기시에는 각각 -0.3%p(62.7%→62.4%), -18.0%p(64.4%→46.4%)로 악화
 - 반면 10분위 소득 증가율은 현 위기 1.6%보다 높은 7.3% 수준(<표 II-21>참조)

나) 재분배 효과

- 소득세율 인하가 야기하는 단기적인 재분배 효과는 개별자료를 이용한 시뮬레이션 분석을 통해 살펴볼 수 있음
- 이를 위해 2006년 가계조사 원자료를 이용하여 시뮬레이션을 통해 소득 구간별 소득세부담 및 실효세율 변화를 분석
 - 2006년 원자료를 2009년 자료로 환산하기 위해 모든 소득 및 소비 지출에 대하여 명목 1인당 소득증가율을 적용
 - 한국은행의 추계치를 따라 2007년과 2008년 각각 7.01%, 5.16%¹⁾의 증가율을 이용하였으며, 2009년도는 2008년도와 동일하게 5.16%를 적용
 - 가구의 소득분위는 가구의 총소득의 합을 기준으로 함
- 세법개정에 따른 소득세액 변화효과를 살펴보면 중산서민층에 대한 경감

1) <http://ecos.bok.or.kr>

률이 높게 나타나 위기시 유동성 제약에 직면할 수 있는 서민층의 소비 증대에 효과적

- 구체적으로 6분위 이하의 중산서민층이 25% 이상의 높은 세부담 경감을 누린 반면 고소득계층인 9~10분위의 세부담 경감률은 전체 평균인 19.4%보다 낮은 18.8%, 14.8% 수준
- 평균적인 세액경감률은 19.4% 수준이나 소득이 낮은 1~3분위의 경감률은 각각 26.3%, 31.8%, 31.9%에 달함
 - 절대 경감액은 기존의 부담액이 낮은 저소득층이 낮게 나타나는데 이는 세율구조의 누진성에 따른 결과

<표 II-24> 소득세법 개정에 따른 세부담액 및 실효세율 변화

(단위: 천원, %)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6분위	7분위	8분위	9분위	10분위	평균
총소득	10,574	18,160	24,341	29,990	36,142	42,593	49,592	58,051	69,918	103,880	44,323
세액											
2008 유지	40	119	228	441	814	1,150	1,699	2,537	3,491	7,731	1,825
공제조정	35	106	205	402	743	1,065	1,602	2,427	3,392	7,599	1,758
공제+세율	29	82	155	312	579	848	1,288	1,994	2,829	6,582	1,470
실효세율**											
2008 유지	0.38	0.66	0.94	1.47	2.25	2.70	3.43	4.37	4.99	7.44	4.12
공제조정	0.33	0.58	0.84	1.34	2.06	2.50	3.23	4.18	4.85	7.32	3.97
공제+세율	0.28	0.45	0.64	1.04	1.60	1.99	2.60	3.43	4.05	6.34	3.32
세액 경감율(%)	-26.3	-31.8	-31.9	-29.3	-28.9	-26.3	-24.2	-21.5	-18.8	-14.8	-19.4
세액감소											
공제조정	5	13	23	39	71	85	97	110	99	132	67
세율조정	6	24	50	90	164	217	314	433	563	1,017	288
총 효과	11	37	73	129	235	302	413	543	662	1,149	355

주: ** 실효세율=소득세액/총소득×100

*** 공제체계 변화로 인한 소득세액 부담분 변화

다. 법인세부담 인하

1) 법인세제 변화

- 2008년 세제개편을 통해 나타난 중요한 법인세부담 변화는 과표구간 조정과 세율 인하임
 - 과표구간은 낮은 세율 적용구간을 1억원 기준에서 2억원으로 상향 조정
 - 세율수준은 2009년 낮은 세율은 2%p, 높은 세율은 3%p 인하되며 2010년에는 각각 1%p, 2%p 인하 예정

<표 II-25> 구간별 법인세율

과표구간	2008년	2009년	2010년
1억원 이하	13%	11%	10%
2억원 이하	25%	11%	10%
2억원 초과	25%	22%	20%

2) 세제변화의 효과

- 법인세제 변화의 효과도 성장효과와 재분배효과로 나누어질 수 있음
 - 성장효과는 기업의 투자활동 증대 등을 통해 나타나게 되며 재분배 효과는 고용, 배당 등의 과정을 통해 나타남
- 법인세율 인하의 성장자극 효과는 IMF 보고서(2009)에서 재정승수의 형태로 나타남
 - 영구적인 법인세율 인하의 재정승수는 1차년도에 0.12 정도에 불과하나 시간의 흐름에 따라 점차 증가하여 5차년도 0.25 수준, 10차년도에는 0.8 수준으로 증가
 - 이러한 패턴을 보이는 것은 성장자극효과가 기업의 행태변화를 통해 나타나기 때문

- 국내경제에 대한 CGE 모형을 이용한 김승래(2009)에 따르면 법인세율 5%p 인하의 경제적 효과는 7.8조원 수준으로 감세로 인한 세수감소분 6.9조원보다 높은 수준
 - 이는 법인세가 상당히 왜곡적인 조세로 낮은 세율 구조로의 전환이 경제전반에 바람직한 정책방향임을 시사

- 따라서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법인세율 인하정책은 중장기 성장률 제고에 매우 긍정적인 역할
 - 시간의 경과에 따른 성장자극효과가 크기 때문

- 법인세율 인하에 따른 재분배효과는 가격 인하에 따른 소비자 잉여변화, 고용, 배당 등 복잡한 경로를 통해 발생
 - 김승래(2009)에 따르면 법인세율 5%p 인하에 따른 소득 대비 혜택규모는 소득분위별로 0.7~1.3% 수준으로 유사
 - 1분위와 10분위의 경감률이 높고 중간분위가 낮은 구조

<표 II-26> 법인세율 5%p 인하의 소득계층별 귀착 효과

(단위: 천원, 2007년 기준)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6분위	7분위	8분위	9분위	10분위
경상소득	5,702	13,954	19,838	24,954	29,901	35,093	40,655	47,700	58,424	87,566
근로소득	1,690	6,912	11,601	14,033	18,288	21,818	28,141	33,876	42,793	65,485
비근로소득	4,012	7,042	8,237	10,921	11,614	13,276	12,514	13,824	15,632	22,082
세부담 혜택	69	138	156	189	227	257	302	389	530	1,152
소득대비 비중	1.21%	0.99%	0.79%	0.76%	0.76%	0.73%	0.74%	0.81%	0.91%	1.32%

주: 여기서 '세부담 혜택'은 계층별 후생증가분으로 측정되며, 이러한 세부담 혜택의 '소득대비 비중'은 경상소득 기준임

자료: 김승래, 「법인세율 인하의 경제주체별 귀착효과 분석」, 한국재정학회 2009 춘계학술대회 발표자료, 2009

라. 그 외 세부담 경감정책

- 내수회복을 위한 단기적인 조세지원 정책도 내수진작에 매우 효과적
 - 주요 정책은 승용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인하, 근로장려금 인상, 비수도권 골프장 개별소비세 등 인하, 부동산 양도세 중과 폐지 등

- 2008년 12월부터 시행된 승용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한시적 인하(2009년 6월말 까지)는 관련 소비를 촉진시켜 2/4분기 성장률 회복에 크게 기여
 - 개별소비세 인하내역: 2,000cc 이하 승용차 : 5%→3.5%, 2,000cc 초과 승용차 : 10%→7%
 - 개별 소비세 감면정책으로 2009년 2/4분기 자동차 생산은 전기 대비 21.7% 증가하였으며 동기 민간소비는 전기 대비 3.3% 증가
 - 수출의 감소세가 여전히 큰 가운데 GDP 성장률 회복에 기여

- 서민층에 대한 급여지원제도인 근로장려금(EITC)제도도 적용대상 확대와 최대급여 인상을 통해 소득지원을 강화
 - 2008년 근로소득에 기초하여 2009년 소득세 신고 후 지급되는데 부부의 총소득이 1,700만원 이하일 때 적용
 - 적용대상 완화 및 급여 인상
 - 자녀 2인 이상, 무주택자 → 자녀 1인 이상, 기준시가 5천만원 이하 1세대 1주택자
 - 최대급여 80만원/연 → 120만원
 - 2009년 시행결과 제도 안내가구 중 90.9%인 72만 4천가구가 신청
 - 전체가구의 4.3%, 근로자가구의 7%에 달하며 신청자 중 일용근로자가구가 59.7% 차지
 - 평균 신청금액은 77만원
 - 2009년 하반기 서민층 소득지원에 큰 역할 기대

□ 비수도권 회원제 골프장에 대한 세제지원으로 지방을 중심으로 내수활성화를 유도

○ 지방골프장에 대한 개별소비세, 종부세, 재산세, 취득세, 체육기금 등을 인하하여 지방경제 활성화 추구

○ 지방골프장에 대한 세금감면으로 이용객 1인당 세금은 약 3만4천원 감소 효과

- 2008년 10월~2009년 4월 기간 동안 전년 동기간에 비해 이용객이 18.2% 증가

- 반면 세금혜택이 없는 수도권 골프장 이용객은 4.5%감소

<표 II-27> 지방 회원제 골프장 제세금 인하

세 목	개별소비세	종부세	재산세	취득세	체육기금
일몰기간	2008.10.1 ~ 2010.12.31	2008.1.1 ~ 2009.12.31	2008.1.1 ~ 2009.12.31	2008.10.1 ~ 2010.12.31	2008.10.1 ~ 2010.12.31
세 율	<조특법> 전액 감면 (일몰제)	<지방세법> 0.5~0.7% <조특법> 200억 면제 (일몰제)	<지방세법> 4%→2% (일몰제)	<지방세법> 10%→2% (일몰제)	<문체부고시> 전액 감면 (일몰제)

<표 II-28> 수도권 회원제 골프장 제세금 현황

세 목	개별소비세	종부세	재산세	취득세(신규)	체육기금
세율 등	목적세포함 21,120원	0.75~2%	4%	10%	3,000원

□ 또한 자동차산업 활성화를 위해 2009년 5월~12월기간 동안 10년 이상 노후차(1999년 12월 31일 이전 등록된)의 교체시 총 250만원을 한도로 개

별소비세, 취득세 및 등록세의 70%까지 감면

- 내수활성화에 기여할 것임

마. IMF의 평가

- IMF는 최근 보고서 “Staff Report for the 2009 Article IV Consultation” (2009. 7)을 통해 우리나라의 경제위기 대응정책을 평가
 - 경제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2009년을 대상으로 시행한 우리나라 재정정책은 2차레(2009년 원 예산, 2009년 추경)에 걸쳐 추진됨
 - 그 규모는 GDP 대비 원 예산 2%, 추경예산 1.7% 규모
 - 그 외 준금융정책으로 고용의 80~90%를 차지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을 강력하게 추진
- 2009년 경기회복을 위한 재정정책의 규모와 구성은 적절한 것으로 평가
 - 경기회복 정책의 구성은 G20 평균과 유사하며 성장자극효과가 높은 사회간접자본 투자와 저소득층에 집중된 이전지출의 비중이 높음
 - 모델 승수를 이용할 경우 경기회복 정책의 성장효과는 2009년 1~1.5%p

<표 II-29> 경제위기 관련 재정정책의 규모

(단위: GDP대비 %)

	2009년	2010년
세입 정책수단	-1.0	-1.2
- 항구적 감세	-0.7	-1.0
- 일시적 수단	-0.3	-0.2
재정지출 정책수단	2.6	...
- 투자	1.0	...
- 중소기업 지원	0.8	...
- 실업자 및 저소득층 지원	0.8	...
- 기타	0.1	...
합 계	3.6	1.2

자료: IMF Staff Report for the 2009 Article IV Consultation, IMF, 2009. 7

- 우리나라의 재정상황과 경제전망을 고려하면 현재의 경제회복 정책을 2010년에도 지속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견해
 - 이는 2009년과 유사한 재정적자 수준을 2010년에도 유지하는 수준
 - 높은 재정적자에 따른 금리상승은 기존의 낮은 이자율 정책의 효과를 상쇄하지 않을 수준으로 평가
 - 다만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정책은 제고할 필요가 있음

- 재정정책의 경우, 중기적으로 균형수준을 회복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평가
 - 세수측면에서는 개인소득세와 법인세의 과세기반을 확충하고 부가가치세를 혹은 사회보장기여금 증가도 검토할 필요
 - 세출측면에서는 고령화와 무관한 지출에 대한 개선과 추가적인 연금개혁을 검토할 필요

- 감세정책의 경우, 경제의 회복단계에서 효과적일 것이라는 평가

While the near-term growth impact of the permanent tax cuts is expected to be relatively small, it could support the recovery once it is under way.

Ⅲ. 외국의 정책동향

- 2008년 미국 금융위기에서 촉발된 경기침체를 극복하기 위해서 세계 각국은 다양한 경기부양책을 시행
 - 이러한 경기부양책은 크게 금융정책과 재정정책으로 나누어지는데 금융정책은 저금리 정책, 재정정책은 대규모 재정지출로 요약될 수 있음
 - 재정정책의 경우 직접적인 세출증대를 통한 내수활성화와 투자, 소비행위 등과 연계된 감세정책으로 이루어짐

-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국제 금융시장에서 중심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미국, 영국, 독일, 일본 등은 시장안정을 위해 대규모 유동성을 공급
 - 유동성지원 규모: 미국 \$7,000억('08. 10), 영국 £2,500억('08. 9), 독일 5,000억유로('08. 10), 일본 ¥33조('08. 12)
 - 금융시장 대책과 함께 실물부문의 위축에 대응하기 위해서 추가적인 조세·재정정책을 발표
 - 많은 나라들이 각국의 특성을 감안한 경기활성화 대책을 발표/시행

- 실물경기 침체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패키지의 경우, 고용 및 소비 진작·유지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그 규모는 각국의 충격 정도, 재정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남
 - 금융위기 및 경기침체의 진원지인 미국과 오랜 경기침체를 겪은 일본의 정책규모가 큼
 - 정책수단의 선정에 있어서도 즉각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보조금, 각종 수당 등을 적극 활용하고 그 대상도 특정계층으로 한정하여 정책의 효과성 제고
 - 미국의 중산층 지원 Tax Credit, 독일의 소득세 낮은 세율 인하, 일본의 생활지원정액급부금, 프랑스의 사회보장급여 추가 등

-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대규모 투자는 미국, 프랑스와 함께 개발도상국인 대만(NT\$4,000억), 중국(18조위안)에서 시행

<표 III-1> 각국의 경기활성화¹⁾ 정책의 규모('08. 10월 ~ '09. 1월)

(단위: 10억 자국통화)

	총규모	기간	2009년 지출	GDP비중(%)
미국	1,007	'09~'19	341.8	2.3
영국	13.3	'08/09~'11/12	16.3 ²⁾	1.1
일본	36,900	'09~'11	12,300 ²⁾	2.4
독일	81	'09~'10	40.5 ²⁾	1.6

주: 1) 금융부문에 대한 유동성지원은 제외

2) 전체기간에 대한 평균 지출규모임

- IMF, Brookings Institute, CBPP(Center on Budget and Policy Priorities) 등도 경제위기 대응 재정정책들의 효과를 극대화하는 조건으로 다음과 같은 '3T 정책'을 제시

- ① Timely(적시성): 정책 시차효과를 감안하여 빠르게 정책을 집행
- ② Targeted(집중성): 총수요 증대효과가 큰 부문에 대해 재정정책을 집중
- ③ Temporary(일시성): 단기적 재정충격을 극대화하고, 중·장기적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 단기적 재정정책의 명확화
 - 이밖에 IMF는 지속성(불경기 지속 가능성 대비), 다각성(분야별 정책 효과가 불분명하므로), 신축성(필요시 추가조치)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이러한 요건들은 중장기적 재정건전성에 좀 더 불리할 것으로 판단됨

- 각국의 경기부양조치들도 재정부담 등을 고려하여 한시적인 정책 혹은 기존계획의 조기집행 등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

- 추가 보조금 지급 및 세율 인하 조치는 1~2년 기간으로 적용

- 국가재정에 대한 압박이 심한 국가에서는 경기부양 정책의 추진과 함께 부분적 증세조치에 대한 검토도 진행
 - 미국은 2010년도 대통령예산교서(2009년 2월)에 포함된 재정건전화 조치로 세입은 향후 10년간 0.7조달러 증가
 - 증세수단은 소득세 증세와 국제조세 강화
 - 영국도 2009 예산안(2009. 4)에서 재정건전성을 위한 선별적 증세방안 제시
 - 최고세율 구간 추가, 고소득자 인적공제 폐지 및 연금공제 제한, 주세 및 담배소비세 인상, 연료세 인상 등이 포함됨
 - 독일도 재정건전화를 위한 조치로 기본법(헌법) 개정에 대해 다음 사항을 포함시키는 것을 발표
 - 정상적인 경기상황에서는 일반정부의 구조적 재정수지를 GDP 대비 -0.5%로 제한, 채무삭감 기금 설립 등

-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현재의 국가부채, 재정적자 수준에 대한 관점이 향후 조세정책의 기초를 설정하는 데 중요

IV. 향후 정책방향

1. 재정상황에 대한 평가

- 올해 4월 추경예산안에 따르면 2009년 국세 수입규모는 164조원 수준으로 예상
 - 추계의 근거로 이용된 경제성장률 -2.0%보다 경제상황이 호전될 경우에는 보다 긍정적으로 볼 수도 있음
 - IMF 전망('09)은 -1.8% 수준
 - 다만 최근 완화되고 있기는 하지만 설비투자의 여전한 부진이 본격적인 경기회복에 걸림돌이 되고 있음

- 2010년도 국세수입의 경우, 일정수준 경기회복을 가정하더라도 2009년도의 세입수준과 유사할 전망
 - 이는 2단계 소득세·법인세의 감세조치 적용 개시와 2009년도 법인들의 영업실적 악화 등을 반영하여 법인세 및 소득세 세수가 줄어들기 때문
 - 따라서 세입확충을 위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

- 세출규모를 고려한 2009년 재정수지는 4월 추경결과에 따르면 GDP 대비 -5.0%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며 국가부채는 35.6% 수준에 달할 전망
 - 2010년의 경우, 2009년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증가한 지출을 중기계획상의 지출규모로 축소할 경우에도 상당한 재정적자가 예상되어 재정지출에 대한 통제노력을 강화할 필요

- IMF(2009)에 따르면 우리나라 관리대상 재정수지는 2014년에 이르러 균형수준에 이를 것으로 전망
 - 국가부채는 다른 선진국에 비해 양호한 수준

2. 조세정책 방향

- 경제위기 이후 조세정책은 성장잠재력 확충이라는 장기 목표와 일관성을 유지하면서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데 기여할 수 있어야 함
 - 성장잠재력의 확충은 위기 이후 세계경제의 재편과정에서 우리 기업들의 기업활동을 더욱 활성화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방안
 - 위기 극복과정에서 악화된 재정건전성을 회복하기 위해서 세입측면에서 일정부분의 역할이 필요

- 두 가지 목표를 조화시키기 위해서는 낮은세율-넓은세원의 원칙을 재확립할 필요
 - 낮은 세율구조는 효율성, 단순성 측면에서 기업활동 및 노동참여를 촉진하는 기제로 작용
 - 넓은 세원구조는 재정건전성 측면에 대한 기여와 함께 비과세·감면으로 인한 경제활동 왜곡을 축소하는 역할
 - 기존의 일반적·무차별적 비과세·감면제도를 축소하고 특정정책 목적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재조정할 필요

- 또한 경제위기 속에서 큰 충격을 받았던 서민층에 대한 배려는 넓은 세원구조의 형성이란 기본방향에서 충분히 고려할 필요
 - 경제위기 직후 분위별 소득은 최하위 소득층인 1분위 계층의 명목소득은 감소하였고 그 이상 분위도 소폭 증가에 그침
 - 세원 확대방안은 상대적으로 소득이 높은 계층에 대한 비과세·감면 축소를 통해 추진하고 서민층의 경우, 자발적인 자산 및 노후소득 형성을 지원할 필요
 - 서민층의 자산 및 노후소득 형성 지원은 생애기간 전체를 통해서는 비용효율적인 방안

- 구체적으로 성장잠재력 확충의 원칙과 일관성을 유지하는 측면에서 법인세와 소득세에 대한 기존의 세율 인하 정책은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

- 세율 인하의 세수효과가 2010~2011년에 분산되어 나타나 2010년 세수측면의 손실이 크지 않음
 - 다만 내년 이후 재정수지 악화를 감안하여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공제제도를 획기적으로 축소하여 추가적인 세원을 확보할 필요
- 법인세 부담은 세계적인 조세경쟁 추세와 성장동력 유지를 위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나갈 필요
- 동일한 세부담이라 할지라도 복잡한 공제제도보다는 세율을 낮추는 것이 단순하므로 투자유도효과, 납세순응비용 측면에서 유리
 - 넓은 세원을 형성하기 위해 기존의 무차별적인 공제(임시투자세액공제 등)제도를 축소하고 정책목적과 직접적인 연관성을 갖는 수단으로 전환할 필요
 - 세율 인하로 세부담이 줄어들어 따라 일반적 공제인 임시투자세액공제(2008년 2.1조원규모) 등의 역할을 축소하고
 - R&D, 에너지절약 등 외부파급효과가 큰 부분과 직접적으로 연계된 지원정책으로 변화하여 성장기여도를 제고할 필요
 - 동시에 지원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지원기준을 투자액 등 투입지표보다 관련 수입 등 성과지표를 중심으로 전환할 필요

<표 IV-1> 주요 국가의 법인세율(2008)

(단위: %)

	일본	미국	영국	홍콩	싱가포르	대만
(최고)법인세율	30.0	35.0	28.0	16.5	18.0('09) 17.0('10)	25.0('09) 20.0('10)

- 소득세제의 경우, 과거 높았던 세부담 증가 속도와 공제규모의 문제를 완화할 수 있도록 세율-공제 구조를 개선할 필요
- 2단계 세율 인하는 정부의 정책신뢰도를 유지한다는 측면에서 유지
 - 세율 인하의 세수효과는 2010~2011년 기간에 걸쳐 나타남
 - 법인세율과 소득세율 간의 차이도 고소득층의 세부담 회피 유인을 줄이기 위해 일정수준으로 유지할 필요(10%p('08)→13%p('10))

- 재정건전성의 고려를 위해 세율 인하로 부담이 낮아지는 고소득계층에 대한 공제를 축소하는 방안이 필요
 - 이후에도 전반적인 공제수준을 일정범위 내에서 관리하여 세입기반의 축소를 방지할 필요
- 상대적으로 효율적인 수단으로 인식되고 있는 소비세제의 역할은 향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필요
- 중산서민층에 대한 정책적 고려는 기본적으로 지원계층의 특정화가 가능한 정책수단을 통해 시행
- 중장기적 측면에서 중산서민층의 자산 및 노후소득 형성 등에 대한 지원이 사회보장 관련 재정부담 완화에 바람직
 - 저축, 연금과세 등
 - 서민층 지원을 위해 새롭게 시행된 근로장려금(EITC)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
 - 제도운영 현황에 대한 분석을 전제로 향후 대상 확대 및 지급주기 조정을 통해 정책효과 증대
 - 대상 확대는 결정시점에서 소득과악이 가능한 분야로 한정할 필요가 있으며 급여의 인상(최대 120만원)에 따라 지급주기의 세분화도 검토할 필요
 - 연간단위 → 분기단위